아태연구 제26권 제3호 (2019) https://doi.org/10.18107/japs.2019.26.3.006

아베 내각의 경제적 국가책략:
다자적 헤징, 경쟁적 관여, 전략적 결속*

윤대엽**

| 목 차 |

Ⅰ. 문제 제기
Ⅱ. 일본의 대중 경제전략: 이론, 역사와 쟁점
Ⅲ. 다자적 헤징 전략
Ⅳ. 경쟁적 관여 전략
Ⅴ. 전략적 결속 전략
Ⅵ. 결론 및 함의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아베 내각 이후 일본 대외전략의 성격을 경제적 국가책략 시각에서 분석했다. 경제회생, 사회안전, 안보개혁 등 장기집권을 기반으로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인 국가개혁은 전후 체제의 국내외적 구속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아베 내각의 안보개혁의 맥락에서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경제적 국가책략은 부상 이후 중국 문제에 대응하여 일본의 역할과 위상을 재편하는 국가전략이다. 본 연구는 전후 일본의 대외전략과 비교되는 아베 내각의 경제적 국가책략을 세 가지로 개념화하여 분석했다. 첫째, CPTPP 협정 등 다자협력의 제도화를 주도하면서 다자적 헤징의 기반을 구축했다. 둘째,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하여 경쟁적 관여를 확대하고 있다. 셋째, 경제관계 이외 군사기술협력 등의 양자 및 다자외교를 통한 전략적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아베 내각이 경제-안보 이익을 결부하여 추진하는 경제적 국가책략이 일중관계 및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미치는 함의를 기반으로 한국 국가전략의 과제를 검토한다.

▪ 주제어: 아베 내각, 경제적 국가책략, 다자적 헤징, 경쟁적 관여, 전략적 결속

* 본 연구는 201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8S1A5A8029603).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

www.kci.go.kr

Ⅰ. 문제 제기

2012년 출범한 아베 내각은 장기집권을 기반으로 일본 사회 전반의 국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회생, 사회안전 및 안보개혁 등의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아베 내각은 안보이익에 기여하는 경제환경 구축을 위한 대외전략을 추진하고 있다.[1] 아베 내각이 표방하는 대외전략의 핵심목표는 아베 독트린(Abe Doctrine)에 함축되어 있다(Hughes 2015). 아베 독트린은 ① 사상, 표현, 언론의 자유 등 인류 보편 가치를 보호하고, ② 법과 규칙에 의한 해양민주 국가(maritime democracy)를 표방하며, ③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④ 문화적 연대와 협력, ⑤ 그리고 인적교류의 확대를 위한 일본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아베 독트린은 경제발전을 중시했던 요시다 독트린(Yoshida Doctrine)이나 경제협력과 번영을 강조했던 후쿠다 독트린(Fukuda Doctrine)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Nilsson-Wrignt & Fujiwara 2015). 아베 독트린이 아베 내각이 표방하는 대외전략의 '가치'라면 헌법 9조 개정, 집단적 자위권 명문화, 안보관계법 제정, 미일동맹 강화, 무기수출 3원칙의 폐지 등을 통해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행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내각의 대외전략은 부상 이후 중국문제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국가전략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Akimoto 2018, 173-195; Hughes 2015). 시진핑 체제 출범을 전후로 중국은 핵심이익이 결부된 분쟁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형대국관계 등 대외관계를 강조하는 통치이념이 등장했고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주변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Reilly 2012). 한편, 시진핑 중심의 권력구조가 강화되면서 1인 집권체제가 강화되고 있다(Economy 2018). 냉전시기 합의를 기반으로 현상유지를 원칙으로 관리되어 왔던 일중관계도 변화되고 있다.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 이후 시진핑 체제는 2013년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국가안전위원회(NSC)를 설치했다. 건국 이후 최초의 주변관계공작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영토 및 주권관련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핵

1)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포괄적인 국가개혁의 세부적인 내용은 박철희 외(2018)의 논의 참조.

www.kci.go.kr

심이익이 결부된 다자협력과 국가에 대한 경쟁, 관여를 통해 상호 의존을 심화하고 이를 강제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윤대엽 2017; 윤대엽 2019). 2018년 현재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영토주권을 기정사실(fait accompli)로 규정하면서 미국은 물론 주변국가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DoD 2019; 정구연 2018).

경제적인 성장에 비례하여 확대되는 중국의 물리적, 제도적, 구조적 영향력에 대응하는 것은 동아시아 주변국의 공동과제다. 경제적 이익, 안보적 이해, 역사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중국문제에 대응하는 주변국의 대응전략은 다층적이다. 동아시아 각국은 경제안보의 이해관계에 따라 경제-안보의 융합 또는 분리, 안보 또는 경제 중심의 대중협력을 추진해 왔다(이승주 2014; Chen & Yang 2013). 구속력이 낮은 연성지역주의(soft regionalism)를 진전시켜 온 아세안(ASEAN)이 동아시아의 다자협력의 구심점이 된 것은 중국을 포함하는 강대국의 관여를 수용하는 개방-균형(open-balancing) 전략 때문이다. 민족문제와 에너지 등의 이해가 결부되어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중국, 러시아는 물론 역외 국가의 관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일방적인 영향력을 견제하는 제도-중첩(institutional layering)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수반되는 잠재적인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전략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경제전략은 1972년 이후 일중관계의 역사적 맥락에서 어떠한 차별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보수우파가 주도하는 아베 내각의 안보개혁은 대외경제전략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가?

본 연구는 경제적 국가책략(economic statecraft)[2] 시각에서 아베 내각의 대외전략을 다자적 헤징(multilateral hedging), 경쟁적 관여(competitive engagement), 그리고 전략적 결속(strategic binding) 등의 개념으로 분석한다. 기존 일중관계에 대한 연구가 안보전략 또는 국방개혁에 집중되어 왔다면, 아베 내각은 과거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협력적 관여전략에서 탈피하여 경제수단을 활용하여 안보적인 이해를 투영하는 복합적 경제-안보전략을

2) Economic Statecraft는 경제국책(經濟國策), 경제적 국책(経済的な國策), 또는 국가가경제통치술로 번안되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국가책략으로 개념화하여 사용한다.

www.kci.go.kr

추진하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아베 내각의 대외경제전략이 경제회생, 사회안전, 안보개혁 등 전후 체제와 단절적인 개혁을 주도하는 포괄적인 개혁과 연계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보수우파의 중국 및 안보위협 인식을 독립변수로 경제-안보가 연계되어 있는 대외경제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전후 체제의 일본과 단절적인 아베 내각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경제적 국가책략의 개념을 설명하고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대외전략이 가진 단절적, 차별적 성격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교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각각 아베 내각 이후 대외전략을 다자적 헤징, 경쟁적 관여, 전략적 결속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아베 내각의 복합적 관여 전략이 일중관계 및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함의를 검토하고 경제적 국가책략의 시각에서 국가전략의 과제를 검토한다.

Ⅱ. 일본의 대중 경제전략: 이론, 역사와 쟁점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오랜 쟁점이다. 일중관계 역시 그 가운데 하나다. 안보적인 인식과 정책에 주목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일본의 국가전략을 균형(balancing)과 편승(bandwagoning) 개념으로 설명해 왔다. 자유주의 시각은 1972년 이후 일본의 대중 전략을 협력적 관여로 설명한다(Jerdén & Hagström 2012; 김규판 2010). 지역안보, 영토분쟁과 인민해방군의 현대화에 대한 양국 간의 쟁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중국공산당의 체제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경제협력을 증진시켰다. 심화되는 경제적 상호의존은 잠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일중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동력이었다. 반면 현실주의는 일중관계의 본질을 경쟁과 갈등으로 규정한다.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비지출을 변화시킨 핵심 요인은 중국이다. 중국의 군비증가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강화하는 내적 균형(internal balancing)과 함께(Samuels 2007; Hughes & Krauss 2007),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 전략을 병행해 왔다(Koga 2016; Hughes 2017). 미어샤이머(Mearsheimer 2006)가 지적하듯 일본이 미국 주도의 균형 연합(balancing coalition)에 참여해 온 것은 중국

www.kci.go.kr

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일본의 대외전략을 균형과 편승 사이에서 혼재된 성격으로 설명하는 시각도 존재한다(양기웅·안정화 2017; Mochizuki 2007). 예를 들어 모치즈키(2007)은 일본의 대중전략을 관여와 헤징이 상호 혼재되어 변화되어 왔다고 설명한다. 첫째, 협력적 관여와 연성 헤징(soft hedging)이다. 연성 헤징은 협력적 주변관계를 추구하는 중국과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경쟁적 관여와 경성 헤징(hard hedging)이다. 경쟁적 관여는 중국의 의도와 영향력 확대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역사, 영토, 대만, 탄도미사일방어 등 소위 4T 문제에 대한 일중 간의 분쟁에 대비하여 미일동맹 및 다자적인 안보협력을 강조한다. 셋째, 균형(balancing)과 봉쇄(containment)다. 중국위협을 가능성이 아닌 사실로 간주하는 이와 같은 시각은 중국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동맹뿐만 아니라 자주적 방위능력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수용은 협력적 관여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일중협력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공통적으로 지리적, 경제적으로 불가분의 상호성(inextricable mutuality)을 가진 일중관계가 협력과 경쟁, 헤징과 관여가 혼재되어 왔음을 강조한다. 2017년 일본 수출의 19.0%, 수입의 24.5%가 중국에 의존할 만큼 일중 간의 상호 의존관계가 구조화되어 왔다.[3] 균형과 편승은 양극단의 선택일 뿐 일본의 대중전략은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경제-안보 전략이 모색되어 온 것이다.

아베 내각은 중국의 잠재적인 위협과 북핵 문제를 필요충분조건으로 전후 구속에서 탈피하는 포괄적인 안보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내각은 임기 내 헌법 9조 개정을 완수할 것임을 공언해 왔다. 집단적 자위권을 명문화하고 특정기밀보호법 및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함으로써 전후 방위정책의 기본제도를 변경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방위장비청 및 미일동맹 조정 메커니즘을 설치하는 등 안보 거버넌스 구조도 재편했다. 또, 통합기동방위전략에 따라 전략증강이 추진되고 있다. 요컨대 아베 내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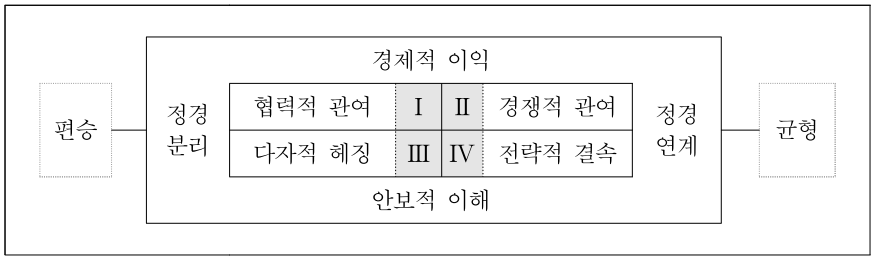
3) 2017년 일본의 대중 무역액은 전년 대비 9.8% 증가했으며, 대중 직접투자는 32.7억 달러로 싱가포르, 한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外務省中國·モンゴル第二課(2018), “最近の中國経濟と日中経濟關係,”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007735.pdf. (2019년 5월 10일 검색) 참조.

www.kci.go.kr

안보개혁은 전후 체제에서 일본을 구속해 온 안보정책의 제도, 구조, 전략을 포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아베 내각의 단절적인 안보개혁은 상호 의존의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경제전략에는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가?

경제적 국가책략(economic statecraft) 개념은 경제협력과 안보적인 헤징 또는 경쟁이 공존하는 일본의 대중전략을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데 유용한 분석개념을 제공한다. 경제적 국가책략이란 경제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전략적, 안보적 이익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Baldwin 1985, 15-18). 경제적 수단은 군사적 수단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그러나 외교적 수단에 비해 국익을 증진하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이해가 비대칭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동북아의 각국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 수준에서 경제와 안보가 결부되어 있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시진핑 체제가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역시 접경안보를 관리하기 위한 경제적 국가책략이다(Reilly 2013b; Norris 2016). 일본의 경제적 국가책략을 ① 경제적 이해와 안보적 이해, 그리고 ② 정경분리와 정경연계를 기준으로 범주화하여 역사적으로 비교하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냉전 시기 일본 정부의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은 정경분리(政経分離)였다. 정경분리란 식민유산, 영토분쟁 등의 정치적인 쟁점과 분리하여 경제관계와 민간교류를 통해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일본이 전후 한일관계, 일중관계 및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증진한 것은 모두 정경분리에 따른 경제외교 전략에 기반했다(Ohashi 2008; 張啓雄 外 2007). 아베 내각 이전까지 정경분리를 원칙으로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적 관여가 추진되어 왔지만 아베 내각 이후 안보적 이해가 투영된 경제적 국가책략이 강화되고 있다. 이를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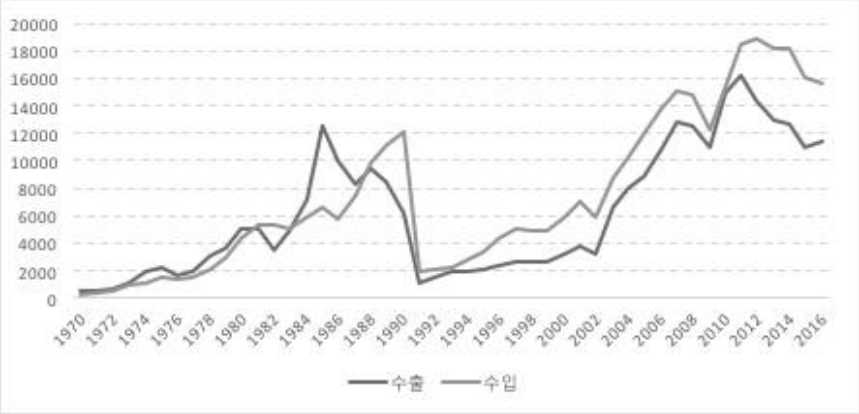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의 대중 경제전략의 변화



www.kci.go.kr

첫째, 1972년 이후 일본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주권, 영토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협력적 관여를 확대했다. 닉슨 독트린 이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재계였다. 1970년 4월 중국은 소위 '주사조건(周四條件)'이라는 4개항의 경협조건[4]을 제시했다. 일본 재계는 이를 수용하고 중국을 국제사회에 참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성철 2011, 7-8). 1970년 12월 초정파 단체인 일중국교회복의원연맹이 설립되고 공명당과 사회당이 일중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직을 설치하면서 일중관계에 대한 정계의 인식도 변화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하여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대만(중화민국)과의 조약 파기, 미군의 대만 및 대만해협 철수,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유엔권한을 인정하면서 일중관계를 복원했다(김성철 2011, 8-11).

<그림 2> 일본의 대중국 수출입액 변화(1970-2016년)[5]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전략이 추진되고 1978년 일중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되면서 일중 간의 경제협력은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일중평화우호조약에 반패권조항이 포함되면서 정치문제와 경제협력을 분리하는 양국 간의 기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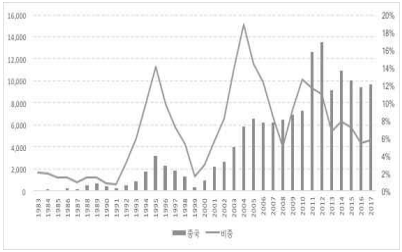
4) 주사조건은 ① 장개석의 중국대륙반공을 원조하고 박정희의 북한에 대한 침범을 원조하는 회사, ② 대만과 남한에 거액의 자본투자를 행하는 회사, ③ 미국의 베트남, 라오서, 캄보디아 침공에 병기탄약을 제공하는 기업 및 ④ 일본에 위치한 미일합병기업 및 미국의 자회사 등이다.

5) World Bank, "Trade Data," https://wits.worldbank.org. (2019년 4월 20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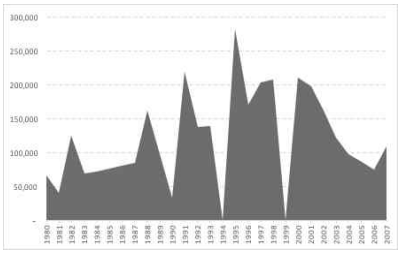
www.kci.go.kr

칙이 공식화되었다. 1982년 일본을 방문한 자오즈양(趙紫陽) 총리가 평화우호, 평등호혜, 장기안정의 3원칙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장기안정 원칙이란 일중관계가 미중소의 3국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과 중국 모두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국의 무역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78년 30억 4,900만 달러, 20억 3,000만 달러였던 일본의 대중 수출입액은 1988년 각각 99억 3,6000만 달러와 57억 2,700만 달러로 증가했다.

<그림 2> 대중국 FDI 및 비중 (1983-2017년)[6]



<그림 3> 대중국 ODA 변화 (1980-2007년)[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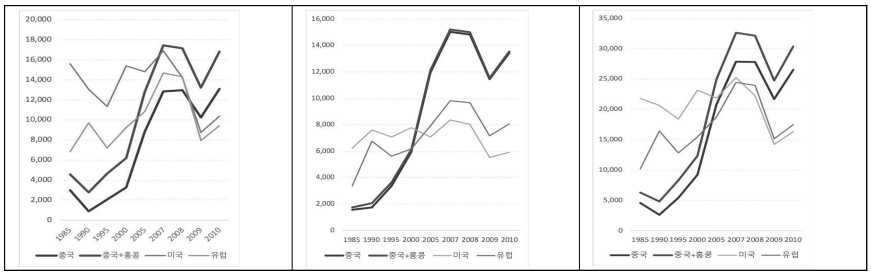
천안문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협력적 관여정책은 지속되었다. 구소련의 해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천안문 사태는 중국체제의 민주화를 전제로 했던 서구의 협력정책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비판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Jerdén & Hagström 2012, 229-230). 1989년 7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ASEAN 회의에서 '중국을 고립시켜 중국이 소련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은 현명한 정책이 아니다'는 미쓰즈카 히로시(三塚博) 외무상의 발언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Kesavan 1990, 673). 일본 정부는 서구의 대중국 경제원조 제한에 동조하는 한편으로 투자 및 중국 방문 등의 금지조치를 완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계속했다(Kesavan 1990, 676-677).

6) JETRO, https://www.jetro.go.jp/en/reports/statistics.html. (2019년 7월 20일 검색)
7) JICA ODA, https://www.jica.go.jp/english/countries/index.html. (2019년 7월 20일 검색)

www.kci.go.kr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일중 무역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그림 2>). 그러나 일본의 대중 FDI는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1988년 5.13억 달러에서 1990년 4.07억 달러까지 감소했던 대중 투자는 1992년 5.26억 달러, 1993년 8.22억 달러, 1994년에는 17.89억 달러로 증가했다(<그림 3>). 1980년대 일본의 FDI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였지만 1995년에는 14.1%까지 증가했다. 국내외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1차(1979-1983년) 3,300만 엔, 제2차(1984-1989년) 4,700만 엔에 이어 1988년 다케시타 수상의 방중 시 합의했던 제3차(1990-1995년) 8,100만 엔의 차관 역시 예정대로 지원되었다. 1979년부터 1995년까지 OECD 국가가 중국에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 총액 223.8억 달러 가운데 일본은 41.9%에 달하는 97.27억 달러를 공여했다(장달중 2010, 290). 1972년 국교관계 정상화 이후 역사문제와 정치갈등에도 불구하고 일중관계는 정경분리 원칙과 '주는 일본'과 '받는 중국'이라는 기본 구도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장달중 2010, 290).

<그림 4> 일본의 대중국 수출(좌), 수입(중), 무역액 변화(1985-2010년)[8]



1990년대 중국위협론이 등장하고 주권문제에 대한 중국의 무력시위를 계기로 중국의 잠재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현실주의(reluctant realism)'가 등장했다(Green & Self 1996). 1995년 5월 중국은 전격적으로 42번째 핵실험을 단행하고,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이덩휘 총통선거 시기에는 미사일 시위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1995년 클린턴 행정부는 동북아의 안

8) 経済産業省, https://www.meti.go.jp/english/statistics/index.html. (2019년 4월 20일 검색)

www.kci.go.kr

보적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적극적 관여(deep engagement) 전략을 표방하고 일미동맹을 재편했다(Nye 1995). 그러나 오랜 협상 끝에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일중 간의 경제협력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중국특수(中國特受)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급진전시켰다(Ohashi 2008, 134-140). 중국과의 교역증가는 일본기업이 사양산업을 중국으로 이전하고 과잉생산의 수출을 증대하는 데 기여했다. 고이즈미 내각 시기 야스쿠니참배 등의 역사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 유럽 등 전통적인 교역대상국을 제치고 일본의 최대 교역국으로 등장했다(<그림 4>). 1972년 이후 일중관계가 진전된 것은 역사, 정치문제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가 진전되어야 한다는 양국의 정치인식과 함께 정부와 및 정부 간에 정책 네트워크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외전략을 추진하면서 주변국가와의 경제협력이 심화되었다.

한편으로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자협력을 위한 일본과 중국의 지역관여도 확대되었다(이승주 2014; Yuasa 2007). 하시모토 내각은 1997년 오부치 보고서[9]에 기반하여 '유라시아 구상'을 발표하고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 확대했다(Rakhimov 2014). 고이즈미 수상 역시 2004년부터 중아아시아 5개국과 '중앙아시아+일본 대화(CAJ Dilalogue)'를 제도화하고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진전시켰다. 이후 아소 타로 외무상은 2006년 11월 중아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계하는 '자유와 번영의 호'를 제안하고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의 지배와 시장경제 등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원하는 외교 전략을 공표하기도 했다. 중국 역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주변지역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제도화되면서 일중 간의 경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까지 일중 양국관계는 전략적인 경쟁을 명시적으로 전제하지 않았다. 하시모토 수상의 유라시아 구상 이후 일본이 러시아, 중국 및 중앙아시아 등의 지역국가를 포괄하기 시작한 것은 유엔외교와 양자외교에 치중했던 전후외교와는 차별적인 변화다(Yuasa 2007, 71). 그러나 다자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중앙아시아 협력이 직접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내세운 것은 아니다. 중국 역시 다자적인 지역협

9) 오부치 게이조 의원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은 1997년 6월 28일에서 7월 9일까지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관련 내용은 Yuasa(2007, 69-74)의 연구 참조.

www.kci.go.kr

력을 주도하기보다 점진적이며 구속력인 낮은 아세안의 연성지역주의(soft regionalism)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다(Beeson & Li 2012). 동아시아의 병렬적인 지역주의(paralleled regionalism)가 형성되어 온 것은 경제협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언적인 지역협력 구상의 결과다(李彦銘 2018; 김기석 2010).

요컨대 아베 내각 이전까지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는 일본의 경제전략은 협력적 관여와 다자적 협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아베 내각의 경제안보전략이 안보개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다자적 헤징, 경쟁적 관여 및 전략적 결속 등의 개념으로 검토한다. 다자적 헤징은 다자협력의 주도적인 제도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상호 의존의 민감성과 취약성을 상쇄하는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쟁적 관여는 중국이 경제-안보적 이해를 가지고 관여하는 국가와 지역에 대한 적극적 관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일본의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치와 체제를 기반으로 안보적인 이해를 공유하는 양자협력을 심화함으로써 경제-안보가 연계된 양자관계를 확대하고 있음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아베 내각은 경제협력이 안보적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경제-안보가 결부된 경제적 국가책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Ⅲ. 다자적 헤징(multilateral hedging) 전략

탈냉전 이후 다자주의에 기초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정부 이외 시민사회와 민간부분의 참여를 통해 초국경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낙관주의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다자주의 역시 강대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다자주의는 강대국이 이익을 규범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한편으로 중견국이나 약소국이 강대국 정치에 대응하는 수단이다. 다자적 유용성(multilateral utility) 개념은 다자주의 제도가 강대국의 일방적인 영향을 중화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균형을 증진하는 역할을 강조한다(Dent 2004). 또, 제도적 균형(institutional balancing)이나 헤징 유틸리티(hedging utility) 등과 같은 개념 역시 중견국이나 약소국이 다자협력을 경제와 안보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설명한다(He 2008; Rüland

www.kci.go.kr

2011). 아베 내각이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다자적 협력에 기반하여 부상 이후 중국에 대응하는 경제적 국가책략의 대표적인 사례다.

2006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소수주의(mini-lateral) 경제협력을 목표로 출범한 TPP는 2008년 부시행정부가 협상참가를 결정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8년 호주, 페루, 베트남이 협상에 참가했고, 2009년 11월 아시아로의 재균형 정책을 표방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TPP의 추진의지를 표명하면서 전략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TPP를 추진한 것은 수출과 고용 증대 등 경제적 목표가 중요했다. 그러나 '중국이 아닌 미국이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해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TPP가 가진 전략적, 정치적 의미를 함축한다(*The White House* 2015/10/06; 石川 2018, 70). TPP 참가를 유보하던 일본의 입장이 변화된 것은 2010년 10월이다. 간 나오토 수상은 국회연설에서 TPP 참여의지를 처음 언급했고, 11월 9일 '포괄적 경제연계에 대한 기본방침'이 발표되면서 TPP 협상참여가 결정되었다. 하토야마 내각이 2009년 발표한 신성장전략과 이를 계승하여 칸 나오토 내각이 발표한 성장전략에는 동아시아의 경제공동체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아태자유무역(FTAAP) 정책이 포함되었을 뿐 TPP는 언급되지 않았다(김호섭 2014). 2012년 노다 내각이 발표한 '일본재생전략(日本再生戦略)'[10]에도 일본 경제의 회생과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을 주도하기 위해 FTAAP, RECP와 함께 TPP 협상참여가 제시되었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정치혼란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런데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여 당선된 아베 총리가 2013년 3월 15일 협상참여를 공식 발표하면서 TPP 논의가 재개되었다. 2012년 중의원 선거 당시 아베 수상은 쌀, 사탕수수, 밀, 유제품 및 소고기 등 중요품목에 대한 예외조치 없는 TPP 교섭참가를 반대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조항(ISDS)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지만 아베 수상이 TPP 참여를 결정한 것이다(Mulgan 2016). 이후 아베 내각은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가 TPP 협상 탈퇴를 발표한 이후에도 TPP 협상을 주도하면서 2018년 3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을 공식 비준했다.

---

10) 内閣官房 (2012), "日本再生戦略について," https://www.cas.go.jp/jp/seisaku/npu/pdf/20120731/20120731.pdf. (2019년 5월 10일 검색)

www.kci.go.kr

<표 1> TPP 협상 관련 주요 일지

일시	세부내용	비고
2005. 5	P4(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FTA	
2008. 3	미국(부시 행정부) TPP 참여	
2008. 12	호주, 페루, 베트남 참여	
2009. 11	미국(오바마 행정부) TPP 참여 확인	
2010. 9	센카쿠/조어도 분쟁	일중 영토분쟁
2010. 10	칸 수상, TPP 참여의사 언급	
2010. 10	3차 협상(브루나이), 말레이시아 TPP 참여	
2012. 10	캐나다, 멕시코 TPP 협상 참여	
2012. 9	센카쿠 열도 국유화	일중 영토분쟁
2013. 3	아베 수상, TPP 참여의사 공표	
2013. 7	일본 TPP 협상 참여	
2016. 2	12개국 TPP 조약 타결	
2017. 1	미국(트럼프 행정부) TPP 탈퇴	
2018. 1	CPTPP 협상 타결	
2018. 3	CPTPP 공식 서명(11개국)	

아베 내각이 TPP 참여를 결정한 요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자유무역 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이다. 2016년 기준으로 CPTPP 참여 11개국의 GDP는 10.2조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13.5%, 무역액은 4.8조 달러로 15%를 차지한다. 미국을 포함하는 경우 CPTPP 참여국가의 GDP 비중은 37.4%(28.8조 달러), 무역비중은 25.9% (8.5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일본의 경제회생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TPP 참여 시 수출과 수입, 소비가 각각 0.55%(2.6조 엔) 0.6% (2.9조 엔), 0.61% 증가하여 GDP는 0.66%(3.2조 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11] 2016년 기준 일본의 FTA 협정이 발효된 국가와의 무역비중은 22.5%로, 67.9%인 한국은 물론 미국(39.1%), 중국(38.7%), EU(31.1%)인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작

11) 内閣官房 (2013), "關稅撤廢した場合の経濟効果についての政府統一試算," https://www.cas.go.jp/jp/tpp/pdf/2013/3/130315_touitsushisan.pdf. (2019년 5월 10일 검색)

www.kci.go.kr

용했다(經濟産業省 2016, 280). 2012년 발효를 앞둔 한미 FTA와 2007년 5월 시작되어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일본이 자유무역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 인식도 작용했다(김호섭 2014, 244-247).

<표 2> TPP 협상국의 상위 수출대상국(2016, 단위: %)[12]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페루	
1	중국	23	중국	17	중국	26	중국	31	중국	21	중국	24
2	미국	20	싱가포르	15	말레이시아	11	일본	12	호주	17	미국	17
3	한국	7	미국	10	인도네시아	8	미국	7	미국	11	캐나다	5
4	대만	6	일본	8	미국	6	한국	6	일본	6	한국	4
5	태국	4	태국	6	대만	4	인도	4	한국	3	일본	4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1	중국	28	미국	23	일본	36	캐나다	18	미국	75	미국	81
2	미국	14	중국	16	한국	16	멕시코	16	중국	5	중국	2
3	일본	9	일본	9	인도	9	중국	8	영국	3	브라질	1
4	한국	7	한국	7	태국	9	일본	4	일본	2	콜롬비아	1
5	브라질	5	네덜란드	4	뉴질랜드	5	영국	4	멕시코	2	독일	1

그러나 아베 내각의 TPP정책은 미중 사이에서 안보적, 전략적 이익을 고려한 선택이다. 2009년 오바마 정부가 TPP 협상참여를 결정하고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이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공식화하면서 TPP의 전략적·정치적 의도가 미중 간의 현안으로 부상했다. 아시아로의 회귀전략의 핵심목적은 아시아에서 미국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Foreign Policy* 2011/10/11).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전략적 의구심을 증폭시켰다(Capling & Revenhill 2011;

12) 다음을 참조함. World Bank, “Trade Data,” https://wits.worldbank.org. (2019년 4월 20일 검색)

www.kci.go.kr

East Asia Forum 2011/11/12). 중국의 반대 입장은 더욱 강경했다. 첫째, 지경학적 의구심이다. 중국을 배제하고 추진되는 TPP가 중국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주변국가[13]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제도적 장벽이다. 높은 수준의 무역개방을 목표로 하는 TPP가 제도화될 경우 중국은 미국 주도로 형성된 제도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의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미중 간의 경쟁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중국은 TPP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봉쇄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宋國友 2016; Gajdos 2013; 李向陽 2012).

아베 내각이 정치비용을 감수한 것 역시 안보이익을 위한 정치적 결단임을 뒷받침한다. 아베 내각이 일본농업협동조합(農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TPP를 강행한 것은 일종의 '충격'이기도 했다(*East Asia Forum*. 2013/04/03).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농협과 자민당 내부의 반대를 고려할 때 TPP 협상결정은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2013년 2월 22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 이후 아베 수상은 TPP 참여를 전격 발표했다. 아베 수상은 TPP가 성역 없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며, 아태지역의 최대 경제권을 창출하는 국가백년대계라고 강조했다. 이후 총리실에 TPP협상을 총괄하는 'TPP관계각료회의(TPPに關する主要閣僚會議)'를 설치하고 수상관저가 TPP 협상을 주도했다. 아베 총리는 "TPP가 경제 효과에 그치지 않으며 일본이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새로운 경제권을 만드는 것,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아시아 태평양에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TPP의 의미를 안보문제와 연관시켰다.[14]

13) <표 3>에서 보듯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은 모두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이 심화되어 온 주변국가다.

14) TPP 참여 결정에 대한 아베 총리의 발표내용은 다음을 참조. 首相官邸 (2013), "安倍內閣總理大臣記者會見," https://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013/0315kaiken.html. (2018년 4월 20일 검색)

www.kci.go.kr

<표 3> 아베 시정방침 TPP 관련 언급 내용15)

구분	언급 내용
183회 국회 (2013)	- 아태지역 최대 경제권을 창출하는 국가백년대계임 - TPP가 성역 없는 관세 철폐가 아니라는 점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
186회 국회 (2014)	- 경제대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공동으로 교섭을 주도, 지킬 것은 지키면서 국익확대에 기여
189회 국회 (2015)	- 개방된 세계로의 담대한 진보 - 개방을 응시하지 않으면 개혁은 성공할 수 없음
190회 국회 (2016)	- 21세기에 부합한 경제규칙을 세계로 확장하려는 위대한 도전 - TPP는 GDP를 14조엔 상승시켜 8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규칙을 공유하는 국가백년대계
193회 국회 (2017)	- TPP 협정은 표준이며 향후 경제 협력의 초석이 될 것임. RCEP 등의 협상을 선도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을 세계로 확장
196회 국회 (2018)	- TPP는 자유무역의 기수이자 자유롭고 공정한 규칙에 따라 21세기형 경제질서 주도

아베 총리가 직접 밝힌 TPP의 안보적 의미는 3가지다. 첫째, TPP는 일미 동맹을 강화하는 경제적 기반이다(Mulgan 2016, 202-203). 부상하는 중국이 초래하는 힘의 불균형을 감안하면 일미 간의 동맹과 경제협력은 지역질서를 안정화하는 기반이다. 아베 수상이 미국과 함께 지역질서를 주도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와 같은 전략목표를 대변한다. 둘째,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기여하는 일본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힘에 의한 일방주의'를 추구하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를 명시한 것이다. 셋째, 역내 다자협력의 제도표준을 주도하는 일본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제재인 TPP는 느슨한 지역협력을 선호해 온 중국을 제도적으로 구속하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일중 경제의 불가분의 상호성이나 동아시아 다자제도의 참여국가가 중복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TPP와 RCEP가 대립적 경쟁제도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향후 RCEP 협상이나 FTAAP와 같은 거대 자유무역의 협상과정에

15) 다음의 사이트에서 아베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首相官邸, https://www.kantei.go.jp/. (2019년 4월 20일 검색)

www.kci.go.kr

서 TPP는 중국을 구속하는 제도적 규칙(institutional rule)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石川 2018, 70-72).

Ⅳ. 경쟁적 관여(competitive engagement) 전략

관여란 현재적 또는 잠재적 이익을 확대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포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공통의 전략적 이해와 이익을 기반으로 긍정적 협력이 진전되는 것이 협력적 관여라면, 경쟁적 관여는 상충하는 핵심이익에 대한 경쟁관계를 기본 전제로 한다(Schadlow 2013). 아베 내각은 부상하는 중국의 구조적, 경제적, 제도적 영향력에 대응하여 일본의 전략적 이익과 영향력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쟁적 관여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ASEAN 및 남중국해 대한 경쟁적 관여다. 아베 내각은 미국-인도-호주를 연계하는 인도-태평양 구상(Indo-Pacific Initiative)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개념은 2007년 아베 수상이 인도 방문 중 '더 넓은 아시아(broader Asia)'의 협력과 번영을 위해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계하는 양국협력을 강조하면서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16] 그리고 2012년 12월에는 미국, 인도, 호주를 연계하여 다이아몬드 대열을 갖추어야 한다고 구체적 개념을 제안했다(*Project Syndicate* 2012/11/27).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기간 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와 재균형정책을 대체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개념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해양 아시아(maritime asia)'라는 개념을 통해 자유로운 항해권이 보장하기 위해 인도-호주-일본과 함께 테러, 해양안보, 북한문제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면서 4자 협력 구도(quadrilateral Framework)가 공식화된 것이다. 2019년 미 국방부는 4개국 이외에도 한국, 필리핀, 대만, 베트남, 태국, 뉴질랜드 등의 국가와의 협력에 기반하고 있음을 명시했다(DoD 2019, 21-43). 한편 일본은 전략을 구상 개념으로 변경하여 안보목적을 완화하는 대신 항만, 에

16) 外務省 (2007), "Confluence of the Two Seas,"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pmv0708/speech-2.html. (2018년 4월 15일 검색)

www.kci.go.kr

너지, 재난대응, 인프라협력과 인적교류 중심의 구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Miller 2019).

둘째, 아베 내각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하는 일본식 관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Foreign Policy* 2018/02/09; Zhao 2018). 아베 내각이 일본 경제의 회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일본재흥전략에는 '인프라 시스템 수출'을 통한 대외진출 전략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6년 5월 23일 일본 정부는 기존 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고품질의 인프라 수출 확대 이니셔티브'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목표는 2020년까지 인프라 시스템 수출을 30조 엔으로 증가하기 위해 인도, ASEAN,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철도, 항만, 물류 등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2016년에 외무성이 발표한 '개발협력중점방침'에는 대외 경제협력이 국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17] 적극적 평화(proactive peace)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공적개발협력의 목표는 ① 국제평화, 안정, 번영과 보편적 가치의 공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②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고 인간안보를 해결하며, ③ 개도국과 지역의 질적 발전(Quality Growth)을 확대하는 것이다. 2017년 발표된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Asia-Africa Growth Corridor)구상은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와 유사하게 인프라 협력에 기반한 협력계획이 포함되었다. 대규모의 무역과 물류 네트워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인프라와 제도를 연계하는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일본의 역할이 구체화되었다(RIS·ERIA·IDE-JETRO 2017).[18]

셋째, 일-러 관계 개선을 위한 아베 내각의 관여전략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베 내각은 정경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정체되어 왔던 일-러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취임 이후 아베 총리는 2019년 7월까지 6회에 걸쳐 러시아를 방문하고 26회의 일러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특히 2013년 4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영토문제로 인한 양국관계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데 합의하고 2016년 5월에는 '새로운 접근(New Approach)' 원칙에 따른

17) 外務省 (2016), "開發協力重点方針," http://www.mofa.go.jp/mofaj/gaiko/oda/files/000356010.pdf. (2019년 5월 10일 검색)

18) 인프라 경제협력의 금융지원을 위해 2017년 1월 200억 엔을 자본금으로 하는 일본 인프라 이니셔티브(JII)가 민관협력으로 설립되었다.

www.kci.go.kr

포괄적 경제협력에 합의했다. 이후 양국은 의료협력, 도시개발, 중소기업, 에너지, 산업다각화, 극동개발, 첨단기술협력 및 인적교류 등 8개 영역의 경제협력을 진전시켜 왔다(박정호 외 2018).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푸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정책은 일러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장덕준 2014). 하지만 크림반도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베 내각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일본의 전략적 이해가 반영된 결과다(Izumikawa 2016, 61-70; *Nikkei Asian Review* 2018/11/23). 한편으로 러시아에게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을 줄이고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인 파트너다. 또, 일본은 일러 평화협정을 통해 북방지역의 외교안보 관계를 안정시킴으로써 센가쿠/조어도 및 남중국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고려도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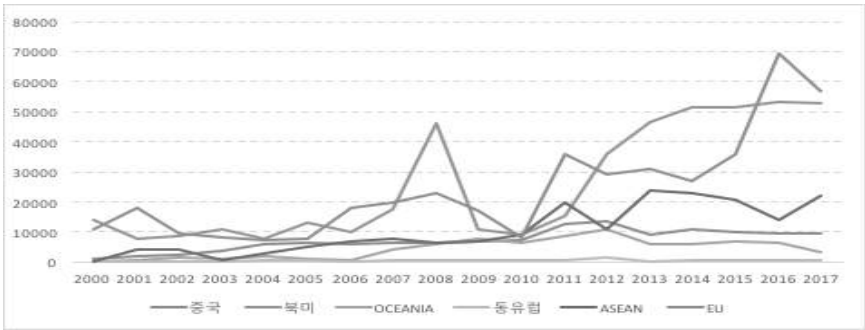
Ⅴ. 전략적 결속(strategic binding) 전략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자본주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국가와의 전략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략적 협력은 경제협력의 구조와 군사협력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센카쿠/조어도 분쟁과 중국의 희토류 경제제재를 분기점으로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미국, EU, ASEAN 지역에 대한 일본기업의 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중국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ASEAN은 중국을 대체하여 일본 기업의 투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지역이다. FDI 구조가 변화하면서 일본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및 구조도 변화했다. 1998년 5%였던 일본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19.7%로 최고를 기록했다. 그런데 2012년 18.1%로 하락한 후 2016년에는 17.6%되었고, 2017년 19.0%으로 소폭 회복되었다. 반면 2011년 15.5%였던 대미 수출 비중은 2016년 20.3%로 증가하여 중국을 제치고 최대 무역국의 위치를 회복했다.

www.kci.go.kr

<그림 5>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변화(2000-2017년, 단위: 백만 USD)[19]



일중 간 무역 및 투자구조의 변화는 영토분쟁과 무관하지 않다. 2010년 영토분쟁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이 축소되었고, 2012년 9월 센카구 열도의 국유화 발표 이후 전국에서 대규모 반일시위로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Foreign Policy* 2012/09/21). 이전과 달리 2012년 중국 정부는 반일시위를 통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위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Reilly 2013a).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차이나 리스크 논의가 재개되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도 세 가지 차원의 차이나 리스크, 즉 정치 및 정책변화에 따른 국가 리스크, 치안과 반일시위 등의 안전 리스크, 그리고 노동비용 및 위안화 절상 등에 따른 운영 리스크가 제기된 바 있다(柯隆 2012; 川島 2015). 2012년 이후 대규모의 반일시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희토류, 관광 등 경제적 수단을 동원한 경제제재가 시행되면서 중국 리스크가 고조된 것이다. 일중 간 경제관계가 일방적인 의도에 따라 단기간에 구조적으로 재균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중무역 갈등에 수반되는 무역질서의 변화와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에 따라 일본의 대중투자와 교역은 장기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안보개혁에 수반되는 방산부문의 국제협력은 경제-안보가 연계된 아베 내각의 경제적 국가책략의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다. 아베 내각은 2014년 4월 노다 내각이 결정한 '방위장비품 등의 해외 이전에 관한 기준'을 수정하여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결정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① 분쟁 당사국 및 유엔결의 위반국가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되, ② 무

19) JETRO, https://www.jetro.go.jp/en/reports/statistics.html. (2019년 4월 20일 검색)

www.kci.go.kr

기 이전은 평화공헌 및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③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는 1967년 사토 수상이 발표한 '무기수출 3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무기수출 금지를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김진기 2014, 111-112; 박영준 2014). 무기수출 3원칙의 폐지는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제목적과 함께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안보전략이 반영된 결과다(Hughes 2018; *CSIS Newsletter* 2014/10/14). 2014년 방위성은 '방위산업·기술기반 전략'의 목표가 ① 안전보장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② 억지력과 위기관리를 능력을 제고하며, ③ 첨단기술에 의한 국내 산업 고도화에 기여함으로써 적극적 평화주의(proactive peace)에 기여하는 방위력을 건설하는 것임을 명시했다.[20]

<표 5>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이후 일본의 방위장비 및 기술협력

구분	대상사업
미국	- 1992년 이래 21개 공동연구, 1개 공동개발 협력 추진 - 4개 공동연구 진행(hybrid electric propulsion, high-speed multi-hull vessel optimization, the comparison of exposure to jet fuel and noise in unit operation, and Chemical Agent Detector-kit Colorimetric Reader) - 1개 공동개발(BMD 요격체계) / F-35, Osprey 공동생산, 정비운영협력
영국	- 방위장비 및 기술이전 협약(2013) / 공대공 미사일추적기술 공동개발(2014) - PVE(Personnel Vulnerability Evaluation), FCAS(Future Combat Air System) 공동개발
프랑스	- 방위장비 및 기술이전협약(2015) - UUV(Unmanned Underwater Vehicle) 개발협력 합의(2017)
이탈리아	- 방위방비 및 기술이전 협상 개시(2017)
호주	- 방위장비 및 기술이전 협약(2014) - 해양유체역학(marine hydrodynamics) 공동개발 (2015) - F-35 프로그램, 획득개혁, 차기 잠수함사업, 방산기술 협력, 양국 방산기업 대화 등의 5개 사업 합의(2014)
인도	- US-2 수륙양용기 분야 공동워킹그룹 합의(2013) - 방의장비 및 기술이전 협약(2015)
ASEAN	- ASEAN-일본 방위장관 회담 3개항 합의(2016) ① 방위장비 및 기술 이전, ② 인적자원 개발, ③ 방위산업 관련 세미나 개최

▪ 일본방위성(2017, 427-430)

20) 防衛省 (2014), "防衛生産·技術基盤戰略: 防衛力と積極的平和主義を支える基盤の强化に向けて," http://www.mod.go.jp/j/approach/others/equipment/pdf/2606_honbun.pdf. (2019년 5월 10일 검색)

www.kci.go.kr

아베 내각의 안보개혁은 헌법(헌법 9조, 집단적 자위권), 제도(특정기밀보호법,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전략(통합기동방위력)뿐만 아니라 국방획득 등 포괄적인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방혁신은 미국 및 서방국가 등 전략적인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베 내각은 국방획득 혁신을 위해 2015년 방위장비청을 신설하고 국방연구개발 및 획득기능을 통합했다. 국방획득 혁신을 위해 국내적으로 방산부문의 혁신과 함께 대외적으로 국방연구개발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과거 일본의 국방연구개발 협력은 미국으로 국한되었다(김진기 2010). 그런데 2015년 이후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등과 '방위장비 및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핵심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안보개혁에 수반되는 국방연구 및 방산부문의 대외협력은 안보적 이해에 기반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경제적 국가책략의 대표적인 사례다.

Ⅵ. 결론 및 함의

양적 완화, 재정투자, 구조개혁 등 아베 내각의 경제개혁이 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개혁은 전후 체제에서 일본을 구속했던 제도와 원칙을 해체시키고 있다. 아베 내각의 대외 경제전략 역시 경제개혁, 안보개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경제적 국가책략은 안보적 이익에 기여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포괄적인 국가전략이다. 다자적 헤징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상호의존의 위험을 관리하고 일본이 다자협력의 제도화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경쟁적 관여는 일중 양국의 핵심이익이 경합하는 국가와 지역에서 일본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관여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결속은 미시적으로 방위산업과 국방혁신을 위한 협력기반이자, 거시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등 아베 독트린이 표방하는 보편적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전략이다. 요컨대 경제적 국가책략 개념을 통해 경제개혁, 안보개혁과 결부되어 추진되고 있는 대외전략을 범주화여 분석함으로써 아베 내각이 가진

www.kci.go.kr

역사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했다. 최근 한일 간의 역사 갈등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한국에 대해 사실상의 경제제재를 결정하면서 안보적 이해가 투영된 경제전략을 강화하는 아베 내각의 경제적 국가책략의 성격은 더욱 분명해졌다.

미중 간의 전략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일본과 중국의 경제제재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게 경제-안보를 연계한 경제적 국가책략은 현실적인 과제가 되었다. 미중 간의 구조적인 무역갈등은 관세전쟁, 환율전쟁, 기술전쟁을 넘어 체제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양국 사이에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 온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근본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중국과 일본의 경제제재는 비대칭적 상호 의존의 취약성과 민감성을 정치·안보적 시각에서 재인식해야 하는 전략적인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제재는 안보이해를 침해하는 경우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다(윤대엽 2017). 아베 내각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규제는 역사문제에 대한 불만을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 발신(signaling)하는 사실상의 경제제재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평화경제 구상 역시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이해가 상호 대항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모순적인 과제다. 경제-안보를 분리해 온 전후질서가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포괄적 시각에서 인식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된 것이다.

아베 내각의 경제적 국가책략은 정경분리를 원칙으로 했던 전후 대외전략의 본질적인 변화를 함축한다. 한국 역시 경제-안보가 연계된 대외 경제전략을 기반으로 양자 및 다자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견국의 입장에서 협력적 관여 또는 다자적 협력을 위한 국가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이익이나 정책능력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적 국가책략은 경쟁, 헤징, 결속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베 내각과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대신 정책목적, 협력대상, 핵심이익에 따라 소극적인 참여, 다자협력의 중재, 또는 적극적인 주도 등의 역할 가운데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나 신북방정책 역시 전략적, 안보적 이해가 투영된 경제적 국가책략이다. 그러나 신북방정책의 경우 북핵문제로 인해 추진이 불가하거나 중국의 소극적인 대등으로 인해 선언적인 전략에 그쳐왔다. 중국, 일본, 미국, 대만이 경쟁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남방지역에서

www.kci.go.kr

한국이 경쟁 중심의 관여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관여의 목적, 대상, 영역에 따라 소극적인 참여, 다자협력의 중대,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구분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유연성 사이에서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동북아에서 경제-안보가 상호 결부된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아베 내각뿐만 아니라 시진핑 체제는 군비경쟁보다 우선하여 안보이익을 투영하는 경제적 국가책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윤대엽 2019). 이는 체제적, 역사적, 안보적 이해로 인해 상호 의존의 협력구조가 훼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미중 사이에서 경제-안보의 상호 대항적인 모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자유무역, 시장질서를 궁극적인 원칙으로 다자협력을 통해 경제이익의 구조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제제재에 상응하는 제재경쟁은 경제적인 손익뿐만 아니라 평화체제를 모색하는 규범적, 전략적 측면에서도 이익보다는 손실이 많을 수 있다. 오히려 경제적 국가책략은 강대국의 갈등을 회피하여 중견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확대하는 국가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중 사이에서 국가이익을 조정해야 하는 베트남,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 등의 국가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소위 중간벨트 (in-between belt) 협력전략을 경제적 국가책략으로 검토할 수 있다.

www.kci.go.kr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김규판 (2010). “중국경제의 부상과 일중 경제관계.”『일본비평』. 6권, pp. 124-151.

김기석 (2010). “동아시아의 새로운 공동체 구상.”『일본공간』. 제7권, pp. 88-115.

김진기 (2010). “탈냉전기 미국과 일본의 방위산업 협력: 미일기술포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국방연구』.제53권. 2호, pp. 79-104.

_____ (2014). “일본의 무기수출정책 변화: 전개과정, 배경, 의도.”『국가전략』. 제20권. 3호, pp. 107-132.

김성철 (2011).『중국·일본 관계의 정치경제, 역사와 전망』. 세종연구소.

김호섭 (2014). “일본의 TPP 정책에 관한 국내논의.”『일본연구논총』. 36집, pp. 236-256.

박영준 (2014). “일본 방위산업 성장과 비군사화 규범들의 변화.”『일본군사문화연구』. 제18권, pp. 43-75.

박정호 외 (2018).『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 정책과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철희 외 (2018).『아베 시대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양기웅·안정화 (2017). “일본의 대중 혼합전략: 전략적 관여와 헤징.”『국제정치논총』. 제57집. 1호, pp. 235-268.

윤대엽 (2017). “중국 특색의 경제제재 전략: 의도, 정책수단과 의도하지 않는 결과.”『통일연구』.제21권. 2호, pp. 95-126.

_____ (2019).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의 경제적 국가책략: 관여, 경쟁과 강제.”『동북아연구』. 제34권. 제1호, pp. 155-183.

일본방위성 (2017).『일본방위백서』. 일본방위성.

장달중 (2010). “중국의 부상과 중-일 간의 파워게임: 일본의 시각을 중심으로.”『일본비평』. 창간호, pp. 285-317.

장덕준 (2014).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동북아.”『러시아연구』. 제29권. 1호, pp. 229-266.

정구연 (2018). “미중 세력전이와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 회색지대갈등을 중심으로.”『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3호, pp. 87-112.

Akimoto, D. (2018). *The Abe Doctrine: Japan's Proactive Pacifism and Security Strateg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Baldwin, D. (1985). *Economic Statecraf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ww.kci.go.kr

Beeson, M. and F. Li (2012). “Charmed or Alarmed? Reading China’s Regional Relation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1, No. 73, pp. 35-51.

Capling, A and J. Ravenhill (2011). “Multilateralising Regionalism: What Role for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he Pacific Review*. Vol. 24. No. 5, pp. 553-575.

Chen, I. T-Y and L. H. Yang (2013). “A Harmonized Southeast Asia?: Explanatory Typologies of ASEAN Countries’ Strategies to the Rise of China.” *The Pacific Review*. Vol. 26. No. 3, pp. 265-288.

Dent, C. (2004). “The Asia-Europe Meeting and Inter-regionalism: Toward a Theory of Multilateral Utility.” *Asian Survey*. Vol. 44. No. 2, pp. 213-236.

Economy, E. C. (2018). *The Third Revolution: Xi Jinping and the New Chinese St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reen, M. and B. Self (1996). “Japan’s Changing China Policy: From Commercial Liberalism to Reluctant Realism.”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Vol. 38, No. 2, pp. 35-58.

He, K. (2008). “Institutional Balancing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Balancing of Power Strategie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4, No. 3, pp. 379-404.

Hughes, C. W. and E. Krauss (2007). “Japan’s New Security Agenda.” *Survival*. Vol. 49. No. 2, pp. 157-176.

Mearsheimer John J. (2006). “Structural Realism.” Tim Dunne et al.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Discipline and Divers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71-88.

Nye, J. S. (1995). “East Asian Security: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Vol. 74. No. 4, pp. 89-102.

Samuels, R. J. (2007). *Securing Japan: Tokyo’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Hughes, C. (2015). *Japa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Under the ‘Abe Doctrine’: New Dynamism or New Dead End?* London: Palgrave Macmillan.

_____ (2017). “Japan’s Emerging Arms Transfer Strategy: Diversifying to Re-centre on the US-Japan Alliance.” *The Pacific Review*. Vol. 31, No. 4, pp. 424-440.

Izumikawa, Y. (2016). “Japan’s Approach to Russia under Shinzo Abe: A Strategic Perspective.” Gilbert Rozman (ed.). *Japan-Russia Relations: Implications*

www.kci.go.kr

for the US-Japan Alliance. Washington: Sasakawa Foundation, pp. 61-70.

Jerdén, B. and L. Hagström (2012). "Rethinking Japan's China Policy: Japan as an Accommodator in the Rise of China, 1978-2011."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12, pp. 215-250.

Kesavan, K. V. (1990). "Japan and the Tiananmen Square Incident: Aspects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Asian Survey.* Vol. 30, No. 7, pp. 669-681.

Koga, K. (2016). "The Concept of Hedging Revisited: The Case of Japan's Foreign Policy Strategy in East Asia's Power Shift."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20. No. 4, pp. 633-660.

Miller, J. B. (2019). "Japan's Changing Vision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Global Asia.* Vol. 14. No. 1, pp. 70-73.

Mochizuki, M. M. (2007). "Japan's Shifting Strategy toward the Rise of China."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0. No. 4-5, pp. 739-776.

Mulgan, A. G. (2016). "Securitizing the TPP in Japan: Policymaking Structure and Discourse." *Asia Policy.* Vol. 22, pp. 193-221.

Nilsson-Wright, John and Kiichi Fuiwara (2015). "Japan's Abe Administration: Steering a Course Between Pragmatism and Extremism." *Chatham House Research Paper*. September.

Norris, W. J. (2016). *Chinese Economic Statecraft: Commercial Actors, Grand Strategy, and State Control*.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Ohashi, H. (2008). "The Sino-Japanese Economic Relations under The Koizumi Administration."『專修經濟學論集』. Vol. 42. No. 3, pp. 129-161.

Rakhimov, M. (2014). "Central Asia and Japan: Bilateral and Multilateral Relations." *Journal of Eurasian Studies.* Vol. 5, pp. 77-87.

Reilly, J. (2012). "China's Unilateral Sanction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5. No. 4, pp. 121-133.

_____ (2013a). "A Wave to Worry About? Public Opinion, Foreign Policy and China's Anti-Japan Protest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3. No. 86, pp. 197-215.

_____ (2013b). "China's Economic Stratecraft: Turning Wealth into Power."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Sydney,* NSW: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RIS, ERIA and IDE-JETRO (2017). *Asia Africa Growth Corridor: Partnership for Sustainable and Innovative Development: A Vision Document*. RIS, ERIA

www.kci.go.kr

and IDE-JETRO.

Rüland, J. (2011). “Southeast Asian Regionalism and Global Governance: Multilateral Utility or Hedging Utilit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33. No. 1, pp. 83-112.

Schadlow, N. (2013). “Competitive Engagement: Upgrading America’s Infludence.” *Orbis.* Vol. 57. No. 4, pp. 501-515.

Yuasa, T. (2007). “Japan’s Multilateral Approach toward Central Asia.” A. Iwashita (ed.). *Eager Eyes Fixed on Eurasia: Russia and Its Neighbors in Crisis.* Sapporo: The Slavic Research Center, Hokkaido University, pp. 65-84.

Zhao, H. (2018). “China-Japan Compete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Geopolitical Rivalry or Healthy Competi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8. No. 118, pp. 558-574.

経濟産業省 (2016).『インフラシステム輸出戰略』. 経濟産業省.

李彦銘 (2018).『日中關係と日本経濟界: 國交正常化から「政冷経熱」まで』. 東京: 勁草書房.

李向陽 (2012). “跨太平洋伙伴關係協定: 中國覺得過程中的重大挑戰.”『國際經濟評論』. 第2期, pp. 1-27.

石川幸一 (2018). “東アジアの経濟と統合: 展開と課題.”『アジア研究』. 第64卷. 4号, pp. 62-79.

宋國友 (2016). “TPP:地緣影響, 中美博弈及中國選擇.”『東北啊論談』. 第2期, pp. 67-74.

柯隆 (2012). “チャイナリスクの再認識:日本企業の對中投資戰略への提言.”『富士研究レポート』. No. 398, pp. 1-34.

張啓雄·葉長城·渡辺直土 (2007). “「政経分離」對「政経一体」の「名實論」的分析:戰後日本の兩岸政策の形成と轉換(1952-1972).”『人文學報』. Vol. 95, pp. 163-238.

川島眞 (2015).『チャイナ·リスク』. 東京: 岩波書店.

2. 기타

이승주 (2014).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21세기 외교전략: 보통국가의 다차원화.”『EAI 국가안보패널보고서』. 동아시아연구원.

DOD (2019).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DOD.

Gajdos, L. (2013).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nd Its Implication on EU Trade.” *Policy Briefing*. European Parliament.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2011년 10월 11일.

www.kci.go.kr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Project Syndicate.* 2012년 12월 27일.

"Japan and Russia Seek End to Island Dispute in China's Shadow." *Nikkei Asian Review.* 2018년 12월 23일.

"Japan's New Arms Export Principles: Strengthening Japan Relations." *CSIS Newsletter.* 2014년 10월 14일.

"Japan's Owen Belt and Road." *Foreign Policy.* 2018년 2월 9일.

"Japan's TPP Shock." *East Asia Forum.* 2013년 4월 3일.

"Remarks by the President after Meeting with Agriculture and Business Leaders o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he White House.* 2015년 10월 6일.

"The Sino Stranglehold: How Badly Could the CHinese Protests Hurt Japan's Economy?" *Foreign Policy.* 2012년 9월 21일.

JETRO. https://www.jetro.go.jp/en/reports/statistics.html. (2019년 4월 20일 검색)

_____. https://www.jetro.go.jp/en/reports/statistics.html. (2019년 7월 20일 검색)

JICA ODA. https://www.jica.go.jp/english/countries/index.html. (2019년 7월 20일 검색)

World Bank. "Trade Data." https://wits.worldbank.org. (2019년 4월 20일 검색)

経濟産業省. https://www.meti.go.jp/english/statistics/index.html. (2019년 4월 20일 검색)

內閣官房 (2012). "日本再生戰略について." https://www.cas.go.jp/jp/seisaku/npu/pdf/20120731/20120731.pdf. (2019년 5월 10일 검색)

_____ (2013). "關稅撤廢した場合の經濟効果についての政府統一試算." https://www.cas.go.jp/jp/tpp/pdf/2013/3/130315_touitsushisan.pdf. (2019년 5월 10일 검색)

防衛省 (2014). "防衛生産·技術基盤戰略: 防衛力と積極的平和主義を支える基盤の强化に向けて." http://www.mod.go.jp/j/approach/others/equipment/pdf/2606_honbun.pdf. (2019년 5월 10일 검색)

首相官邸 (2013). "安倍內閣總理大臣記者會見." https://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013/0315kaiken.html. (2018년 4월 20일 검색)

_____. https://www.kantei.go.jp/. (2019년 4월 20일 검색)

外務省 (2007). "Confluence of the Two Seas."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pmv0708/speech-2.html. (2018년 4월 15일 검색)

_____ (2016). "開發協力重点方針." http://www.mofa.go.jp/mofaj/gaiko/oda/files/000356010.pdf. (2019년 5월 10일 검색)

外務省中國·モンゴル第二課 (2018). "最近の中國經濟と日中經濟關係."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007735.pdf. (2019년 5월 10일 검색)

www.kci.go.kr

| **논문투고일** : 2019년 08월 19일 |
| **논문심사일** : 2019년 09월 02일 |
| **게재확정일** : 2019년 09월 11일 |

www.kci.go.kr

| ABSTRACT |

Abe Cabinet's Economic Statecraft: Multilateral Hedging, Competitive Engagement, and Strategic Binding

YOON, Dae-yeob
(Dept. of Military Studies, Daejeo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ing nature of Japan's external strategy after Abe's cabinet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statecraft. Based on a stable long-term government, Abe Cabinet is bring a fundamental changes in domestic and external restraints of Japan in the post-war by implementing comprehensive national reforms for economic revival, social safety and security reform. In particular, the Abe cabinet's economic statecraft, aimed at creating an economic environment that contributes to its security interests, is being pursued as a national strategy to reshape Japan's role and status in response to China problems after the rise. This study conceptualized the economic statecraft of the Abe cabinet in three ways, and analyze external strategy of Japan differing from that of post-war era. First, it built the foundation for multilateral hedging, by lead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ultilateral cooperation such as CPTPP agreement. Second, it is expanding competitive engagement in response to China's BRI initiative. Third, Tokyo is strengthening strategic alliance through bilateral and multilateral diplomacy including 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beyond economic relations.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Abe cabinet's economic statecraft on Japan-China relations and regional order in East Asia, this research reviews the tasks of Korea's national strategy.

www.kci.go.kr

▪ Key words: Abe Cabinet, Economic Statecraft, Multilateral Hedging, Competitive Engagement, Strategic Binding

www.kci.go.kr